

- 여야는 이미 합의된 올바른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조속히 이행하라 -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움직임이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채택된 데 이어 북한의 핵실험 등에 대한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임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11년째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지난 1월 29일 모처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도 여전히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반대논리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남북간 대화, 협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인데 현시점에서 이러한 논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오히려 북한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이 북한 정권의 비민주성과 인권탄압에 기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이야 말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바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설치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여 시민사회의 북한인권증진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국회는 이미 합의된 바에 따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6. 2. 10.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김태훈